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윤혜령 편집

01

평화·비핵화

평화체제 관련 정상간 합의
비핵화 관련 주요 합의
대통령 주요 연설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윤혜령 편집

01

평화·비핵화

평화체제 관련 정상간 합의
비핵화 관련 주요 합의
대통령 주요 연설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1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인 김연철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박주화, 윤혜령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 S B N 978-89-8479-921-9 94340
978-89-8479-920-2 (전4권)
가 격 11,500원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다. 평화정착이 비핵화의 속도를 재촉하고,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의 동력이다. 2018년 평창이 평화의 기회를 제공했고, 남북, 북미의 연쇄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가 왔다. 물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산맥을 넘어야 할 것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의 기차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주요 합의, 남북관계의 분야별 주요합의, 그리고 북한의 과거 제안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상의 참여자 모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 합의를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의 주요합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화체제는 비핵화의 환경이고,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화정착이 필요하다. 알고 보면 과거의 비핵화 협상도 포괄적 협상 형식이었다.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교환이었고, 여기서 안전보장은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약속과 이행 사이의 간극을 주목해야 하지만,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 만들기를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적대국가 사이의 관계 개선 과정이나 ‘풀기 어려운 분쟁’의 평화협정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걸렸지만 약속을 이행해서 평화를 정착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분쟁의 성격이 다르지만, 합의문은 주고받은 타협의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남북관계나 해외사례에서 합의문은 문서가 작성되는 당시의 관계를 반영한다.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의제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의제는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합의이후 이행을 통해 합의문은 점점 더 구체화된다. 이 자료집이 합의문의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의 목표를 향해 걷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료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통일연구원 원장

김연철

I. 평화체제 관련 정상간 합의 1

1. 남북합의 3

 (1) 6·15 남북공동선언 [2000.06.15.] 3

 (2)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10.04.] 7

 (3)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04.27.] .. 17

 (4) 9월 평양공동선언 [2018.09.19.] 28

2. 한미합의 32

 (1)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11.17.] 32

 (2)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2009.06.16.] 43

 (3)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2015.10.16.] 50

 (4) 한미 공동성명 [2017.06.30.] 56

 (5) 한미일 공동성명 [2017.06.30.] 69

3. 북미합의 73

 (1)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8.06.12.] 73

4. 북일합의 79

 (1) 조일 평양선언 [2002.09.17.] 79

5. 북중합의 82

 (1)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07.11.] 82

6. 북러합의 84

 (1)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07.06.] 84

 (2)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2000.02.09.] 87

목 차

II. 비핵화 관련 주요 합의	91
1. 남북합의	93
(1)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02.19.]	93
2. 북미합의	97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미합중국 공동성명 [1993.06.11.] ...	97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기본합의문 [1994.10.21.]	101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컴뮤니케 [2000.10.12.]	111
(4) 2.29 조선외무성 조미회담에 대한 합의사항 언급 [2012.02.29.]	119
3. 6자회담 합의	123
(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합의) [2005.09.19.]	123
(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 [2007.02.13.]	129
(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 [2007.10.03.]	138
III. 대통령 주요 연설	145
1. 전임 대통령 연설	147
(1) 노태우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변명을 위한 '7·7 특별선언' [1988.07.07.]	147
(2) 노태우 대통령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1988.10.18.]	151
(3)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제50주년 경축사 [1995.08.15.]	155



(4)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선언 -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 (베를린 자유대학) [2000.03.09.]	158
(5) 김대중 대통령 CNN 회견 기초연설 [1999.05.05.]	166
(6) 노무현 대통령 미국 국제문제협의회(WAC) 주최 오찬 연설 [2004.11.12.]	170
(7) 노무현 대통령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 [2007.08.15.]	176
(8) 노무현 대통령 2007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2007.10.04.]	183
(9) 이명박 대통령 CFR·KS·AS 공동주최 오찬 연설 [2009.09.21.]	197
(10) 이명박 대통령 제64차 UN총회 기초연설 -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코리아와 녹색성장 [2009.09.23.]	201
(11) 이명박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2011.10.13.]	203
(12)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2013.05.08.]	206
(13)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2014.03.28.]	212
(14)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70주년 경축사 [2015.08.15.]	224
2. 문재인 대통령 연설	229
(1) 미국전략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연설 [2017.06.30.]	229
(2) 쿠퍼버 재단 초청연설 [2017.07.06.]	233
(3) 남북정상 공동선언 발표문 [2018.04.27.]	242
(4) 판문점 정상회담 만찬 환영사 [2018.04.27.]	244
(5)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2018.05.27.]	248
(6)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8.08.15.]	251



I

평화체제 관련 정상간 합의

1. 남북합의

(1) 6·15 남북공동선언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2000.06.15.]

국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In accordance with the noble will of the entire people who yearn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nation, President Kim Dae-ju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irman Kim Jong-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ld a historic meeting and summit talks in Pyongyang from June 13 to June 15, 2000.

The leaders of the South and the North, recognizing that the meeting and the summit talks, the first since the division of the country, were of great significance in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developing South-North relations and realizing peaceful reunification, declared as follows:

1.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resolve the question of reunification on their own Initiative and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who are the masters of the country.
2. Acknowledging that there are common elements in the South’s proposal for a confederation and the North’s proposal for a federation of lower stage as the formulae for achieving reunification, the South and the North agreed to promote reunification in that direction.
3.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promptly resolve humanitarian issues such as exchange visits by separated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on the occasion of the August 15 National Liberation Day and the question of former long-term prisoners who had refused to renounce Communism.

4.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consolidate mutual trust by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and by stimulating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civic, cultural, sports,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all other fields.
5.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hold a dialogue between relevant authorities in the near future to implement the above agreement expeditiously.

President Kim Dae-jung cordially invited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irman Kim Jong-il to visit Seoul, and Chairman Kim Jong-il decided to visit Seoul at an appropriate time.

15 June 2000

Kim Dae-jung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Kim Jong-il

Chairman,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Official website)

(2)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2007.10.04.]

국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President Roh Moo-hyu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hairman Kim Jong Il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sident Roh visited Pyongyang from October 2-4, 2007.

During the visit, there were historic meetings and discussions.

At the meetings and talks, the two sides have reaffirmed the spirit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had frank discussions on various issues related to realizing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relation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mmon prosperity of the Korean people and unification of Korea.

Expressing confidence that they can forge a new era of national prosperity and unification on their own initiative if they combine their will and capabilities, the two sides declare as follows, in order to expand and advance South-North relations based o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1.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uphold and endeavor actively to realize the June 15 Declaration.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resolve the issue of unification on their own initiative and according to the spirit of “by-the-Korean-people-themselves.”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work out ways to commemorate the

June 15 anniversary of the announcement of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to reflect the common will to faithfully carry it out.

2.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firmly transform inter-Korean relations into ties of mutual respect and trust, transcending the differences in ideology and systems.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no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other and agreed to resolve inter-Korean issues in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reunification.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overhaul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apparatuses in a bid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in a reunification-oriented direction.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proactively pursue dialogue and contacts in various areas, including the legislatures of the two Koreas, in order to resolve matters concerning the expansion and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a way that meets the aspirations of the entire Korean people.

3.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closely work together to put an end to military hostilities, mitigate tensions and guarante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not to antagonize each other, reduce military tension, and resolve issues in dispute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oppos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dhere strictly to their obligation to nonaggression.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hold talks between the

South's Minister of Defense and the North's Minister of the People's Armed Forces in Pyongyang in November to discuss ways of designating a joint fishing area in the West Sea to avoid accidental clashes and turning it into a peace area and also to discuss measures to build military confidence, including security guarantees for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4. The South and the North both recognize the need to end the current armistice regime and build a permanent peace regime.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lso agreed to work together to advance the matter of having the leaders of the three or four parties directly concerned to convene on the Peninsula and declare an end to the war.

With regard to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work together to implement smoothly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2007 Agreement achieved at the Six-Party Talks.

5.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facilitate, expand, and further develop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on a continual basis for 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and co-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common interests, co-prosperity and mutual aid. The South and the North reached an agreement on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investments, pushing forward with the building of infra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Given the special nature of inter-Korean cooperative projects,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grant preferential

conditions and benefits to those projects.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create a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in the West Sea” encompassing Haeju and vicinity in a bid to proactively push ahead with the creation of a joint fishing zone and maritime peace zone, establishment of a special economic zone, utilization of Haeju harbor, passage of civilian vessels via direct routes in Haeju and the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complete the first-phase construc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t an early date and embark on the second-stage development project.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open freight rail services between Munsan and Bongdong and promptly complete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passage, communication, an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discuss repairs of the Gaeseong-Sinuiju railroad and the Gaeseong-Pyongyang expressway for their joint use.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establish cooperative complexes for shipbuilding in Anbyeon and Nampo, while continuing cooperative projects in various areas such as agricultur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upgrade the status of the exist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to a Joint Committe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be headed by deputy prime minister-level officials.

6.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boost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social areas covering history, language,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and arts, and sports to highlight the long history and excellent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carry out tours to Mt. Baekdu and open nonstop flight services between Seoul and Mt. Baekdu for this purpose.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send a joint cheering squad from both sides to the 2008 Beijing Olympic Games. The squad will use the Gyeongui Railway Line for the first-ever joint Olympic cheering.

7.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actively promote humanitarian cooperation projects.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expand reunion of separated family members and their relatives and promote exchanges of video messages.

To this end,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station resident representatives from each side at the reunion center at Mt. Geumgang when it is completed and regularize reunions of separated family members and their relatives.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actively cooperate in case of emergencies, including natural disast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fraternal love, humanitarianism and mutual assistance.

8.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increase cooperation to promote the interest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verseas Korean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hold inter-Korean prime ministers' talk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Declaration and have agreed to hold the first round of meetings in November 2007 in Seoul.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hat their highest authorities will meet frequently for the advanc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Pyongyang, 4 October 2007

Roh Moo-hyun

President

Republic of Korea

Kim Jong Il

Chairman, National

Defense Commiss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Official website)

(3)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018.04.27.]

국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철폐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During this momentous period of historical trans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enduring aspiration of the Korean people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hairman Kim Jong-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ld an Inter-Korean Summit Meeting at the 'Peace House' at Panmunjeom on April 27, 2018.

The two leaders solemnly declared before the 80 million Korean people and the whole world 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a new era of peace has begun.

The two leaders, sharing the firm commitment to bring a swift end to the Cold War relic of longstanding division and confrontation, to boldly approach a new era of national reconciliation, peace and prosperity, and to improve and cultivate inter-Korean relations in a more active manner, declared at this historic site of Panmunjeom as follows :

1. South and North Korea will reconnect the blood relations of the people and bring forward the future of co-prosperity and unification led by Koreans by facilitating comprehensive and groundbreaking advanc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Improving and cultivating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prevalent desire of the whole nation and the urgent calling of the times that

cannot be held back any further.

- ① South and North Korea affirmed the principle of determining the destiny of the Korean nation on their own accord and agreed to bring forth the watershed moment for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by fully implementing all existing agreements and declarations adopted between the two sides thus far.
- ②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hold dialogue and negotia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at high level, and to take activ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s reached at the Summit.
- ③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establish a joint liaison office with resident representatives of both sides in the Gaeseong region in order to facilitate close consultation between the authorities as well as smooth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 ④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encourage more active cooperation, exchanges, visits and contacts at all levels in order to rejuvenate the sense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the two sides will encourage the atmosphere of amity and cooperation by actively staging various joint events on the dates that hold special meaning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June 15, in which participants from all level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arliaments, political parties, and civil

organizations, will be involved. On the international front, the two sides agreed to demonstrate their collective wisdom, talents, and solidarity by joint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s such as the 2018 Asian Games.

- ⑤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endeavor to swiftly resolve the humanitarian issues that resulted from the division of the nation, and to convene the Inter-Korean Red Cross Meeting to discuss and solve various issues including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this vein,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proceed with reunion programs for the separated families on the occasion of the National Liberation Day of August 15 this year.
- ⑥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implement the projects previously agreed in the 2007 October 4 Declaration, in order to promote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co-prosperity of the nation. As a first step, the two sides agreed to adopt practical steps towards the connec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railways and roads on the eastern transportation corridor as well as between Seoul and Sinuiju for their utilization.

- 2. South and North Korea will make joint efforts to alleviate the acute military tension and practically eliminate the danger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lleviating the military tension and eliminating the danger of war is a highly significant challenge directly linked to the fate of the Korean people and also a vital task

in guaranteeing their peaceful and stable lives.

- ①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completely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including land, air and sea, that are the sourc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In this vein, the two sides agreed to transform the demilitarized zone into a peace zone in a genuine sense by ceasing as of May 1 this year all hostile acts and eliminating their means, including broadcasting through loudspeakers and distribution of leaflets, in the area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 ②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devise a practical scheme to turn the areas around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into a maritime peace zone in order to prevent accidental military clashes and guarantee safe fishing activities.
 - ③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take various military measures to ensure active mutual cooperation, exchanges, visits and contacts.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frequent meetings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including the Defense Ministers Meeting, in order to immediately discuss and solve military issues that arise between them. In this regard, the two sides agreed to first convene military talks at the rank of general in May.
3. South and North Korea will actively cooperate to establish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Bringing an end to the current unnatural state of armistice and establishing a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historical mission that must not be delayed any further.

- ① South and North Korea reaffirmed the Non-Aggression Agreement that precludes the use of force in any form against each other, and agreed to strictly adhere to this Agreement.
- ②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carry out disarmament in a phased manner, as military tension is alleviated and substantial progress is made in military confidence-building.
- ③ During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pursue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declaring an end to the War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 ④ South and North Korea confirmed the common goal of realizing,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South and North Korea shared the view that the measures being initiated by North Korea are very meaningful and crucial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d to carry out their respective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is regard.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seek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leaders agreed, through regular meetings and direct telephone conversations, to hold frequent and candid discussions on

issues vital to the nation, to strengthen mutual trust and to jointly endeavor to strengthen the positive momentum towards continuous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s well as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context, President Moon Jae-in agreed to visit Pyongyang this fall.

April 27, 2018

Done in Panmunjeom

Moon Jae-in
President
Republic of Korea

Kim Jong-un
Chairman State Affairs
Commission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Official website)

(4) 9월 평양공동선언 [2018.09.19.]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 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미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 한미합의

(1)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on the ROK-US Allianc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005.11.17.]

국문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2005년 11월 17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경주에서 노 대통령과 함께 체험할 수 있었던 한국의 자연미와 옛 문화에 대한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 북한 핵문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그리고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미 동맹)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50여 년 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 왔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2003년 5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 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성공적으로 합의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재조정이 한미 연합방위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데 대해 공동의 이해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위협에의 대처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및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증진을 위해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주한미군 일부 감축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측간에 이루어진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위한 한국군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관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2006년 초에 첫 번째 전략대화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북한 핵문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하고,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이 조속하고 검증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9월 19일 채택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공약을 환영하고, 공동성명에 제시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 이행이 논의될 제5차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구축)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 진전과 상호 보강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화해의 진전에 따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6자회담과는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 간에 개최되어야 하고 6자회담의 진전에 수반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으며,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과 6자회담이 상호 보강하기를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평화협상이 한미 동맹의 평화적 목표와 부합되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 감소와 신뢰 증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의 희망에 입각하여 그들의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경제·통상 관계)

양 정상은 APEC이 아시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주요 경제협력체로서 향후 역내 중요한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다가오는 6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 및 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의 최종 타결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국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번영과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비자면제 계획 가입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함께 비자면제 계획의 로드맵을 개발 하는데 공동 노력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비자면제 계획 가입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양국간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류 증진과 상호 이해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 및 범세계적 협력)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역내 안보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다자안보대화 및 협력메카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목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이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다는 데 참가국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데 유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PKO 활동과 같은 유엔에서의 양자간 협력과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초국가적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안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 노력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결 어)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동맹간 완전한 동반자관계를 향해 계속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President Roh Moo-hyu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President George W. Bush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ld a summit meeting on November 17, 2005, in Gyeongju.

President Bush expressed his deep appreciation for Korea's natural beauty and ancient culture which he was able to experience together with President Roh at Gyeongju.

The two leaders had an in-depth discussion on a wide range of issues: the allianc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ter-Korean relations and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operation, and cooperation in regional and global issues.

Reaffirming that the alliance is strong, the two leaders concurred that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essential for establishing dur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highlighted the contribution of the alliance to sec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for the past fifty years.

The two leaders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steady development of the ROK-U.S. relationship into a comprehensive, dynamic and mutually-beneficial alliance relationship, as agreed upon during the May 14, 2003, summit in Washington D.C.

The two leaders reviewed the successful force realignment

agreements and shared the view that this realignment will further enhance the combined defense capability of the alliance. They expressed the common understanding that U.S. Forces-Korea (USFK) is essential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two leaders agreed that the alliance not only stands against threats but also for the promotion of the common values of democracy, market economy, freedom, and human rights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spoke highly of the successful agreements on the relocation of USFK bases including Yong-san Garrison, and the partial reduction of USFK, which was accomplished through close ROK-U.S. consultation. Both leaders expressed satisfaction that the agreements between the two sides were being faithfully implemented.

President Bush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assistance that Korean troops are giving to a swifter establishment of peace and reconstruction in Iraq and Afghanistan and also for the contribu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towards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through such efforts.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agreed to launch a strategic dialogue called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SCAP) at the ministerial-level to consult on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issues of mutual interest. The two leaders agreed to have the first strategic dialogue at the beginning of 2006.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reiterated that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ll not be tolerated, and reaffirmed the principles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hould be resolved through peaceful and diplomatic means and that North Korea should eliminate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promptly and verifiably.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concluded during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as an important step towards the goal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They welcomed North Korea's commitment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ake measures outlined in the Joint Statement.

The two leaders looked forward to progress in the fifth round of talks, which should be dedic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President Roh reaffirmed that the ROK will continue to pursue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its Peace and Prosperity Policy and in harmony with progress in resolving the nuclear issue so that both are mutually reinforcing. President Bush expressed support for South-North reconciliation and pledged to continue clos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s it develops.

The two leaders shared a common understanding that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provide an important basis to build a dur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leaders agreed that reducing the military threa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oving from the current armistice mechanism to a peace mechanism would contribute to full reconcili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ursuant to the September 19th Six Party Joint Statement, the two leaders agreed that discussions on a peace regime should take place amongst directly-related parties in a forum separate from the Six-Party Talks and following progress in those Talks, and expected that the discussions on a peace regime and the Six Party Talks will be mutually reinforcing.

They agreed that these peace discussions should lead to a decreased military threat and increased confidence on the peninsula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eaceful intentions of the U.S.-ROK alliance.

The two leaders exchanged views on the situation for the people of the North and, based on a common hope for a better future, agreed to continue seeking ways to improve their condition.

The two leaders agreed to strengthen ROK-U.S. cooperation so that APEC, as a major economic forum encompassing the Asia-Pacific, can respond more effectively to important demands from the region in the future.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agreed to clos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with a view to ensuring the success of the forthcoming 6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and the final conclusion of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The two presidents recognized that close economic ties are an

important pillar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agreed that deepening and strengthening our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ill contribute to the prosperity and freedom of both nations.

President Bush announced that the U.S. will work with the ROK to develop a visa waiver program roadmap to assist Korea in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membership in the program. Korea's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VWP reflects our strong bilateral partnership and will contribute to enhance exchanges and mutual understanding.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agreed to make common efforts to develop a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and a cooperation mechanism, so as to jointly respond to regional security issues. In this regard, both leaders noted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Six-Party Talks agreed through the Joint Statement to look for ways and means to promote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at there wa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the participants that the Six-Party Talks could develop into such a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nsultative mechanism onc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The two leaders also agreed to continuously strengthen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rough such activities as peace-keeping operations.

The two leaders agreed to continue to cooperate in fighting the global war on terror, and dealing with various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including transnational crimes.

The two leaders agreed to cooperate in arms reduction and effort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t a regional and global level.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agreed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towards a full partnership between allies.

November 17, 2005

Source: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 Released by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2009.06.16.]

국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한국민과 미국민을 굳게 결속시키는 영속적인 우의와 공동의 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받쳐주는 유대는 우리 양 국민들간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강화·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 시민사회, 문화, 학술 및 여타 기관들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사회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계속해서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 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 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미 동맹은 21세기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여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기구 및 협력 상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 사회와 개방 경제가 번영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우리 양국과 민간 기구들은 이 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양국 정부는 역내 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내 협력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와 같은 범세계적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는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building an Alliance to ensure a peaceful, secure and prosperous future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world.

Our open societies, our commitment to free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and our sustained partnership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enduring friendship, shared values, and mutual respect that tightly bind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s.

The bonds that underpin our Alliance and our partnership are strengthened and enriched by the close relationships among our citizens. We pledge to continue programs and efforts to build even closer ties between our societies, including cooperation among business, civic, cultural, academic, and other institutions.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Mutual Defense Treaty remains the cornerstone of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which has guarantee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for over fifty years. Over that time, our security Alliance has strengthened and our partnership has widened to encompas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Together, on this solid foundation, we will build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of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scope, based on common values and mutual trust. Together, we will work shoulder-to-shoulder to tackle challenges facing both our nations on

behalf of the next generation.

The Alliance is adapting to changes in the 21st Century security environment. We will maintain a robust defense posture, backed by allied capabilities which support both nations' security interests. The continuing commitment of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e U.S. nuclear umbrella, reinforces this assurance. In advancing the bilateral plan for restructuring the Alliance, the Republic of Korea will take the lead role in the combined defense of Korea, supported by an enduring and capable U.S. military force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region, and beyond.

We will continue to deepen our strong bilateral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We recognize that the Korea-U.S.(KORUS) Free Trade Agreement could further strengthen these ties and we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chart a way forward. We aim to make low-carbon green growth into a new engine for sustainable economic prosperity and will closely cooperate in this regard. We will strengthen civil space cooperation, and work closely together on clean energy research and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rough our Alliance we aim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all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ing a durable peace on the Peninsula and leading to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principles of free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We will work together to achieve 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s well as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o promote respect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will work jointly with regional institutions and partners to foster prosperity, keep the peace, and improve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of the region. We believe that open societies and open economies create prosperity and support human dignity, and our nations and civic organizations will promote human rights, democracy, free markets, and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the region. To enhance security in the Asia-Pacific, our governments will advocate for, and take part in, effective cooperative regional effort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confidence and transparency regarding security issues among the nations of the region.

Our governments and our citizens will work closely to address the global challenges of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iracy, organized crime and narcotics, climate change, poverty,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energy security, and epidemic disease. The Alliance will enhance coordination on peacekeeping, post-conflict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assistance, as is being undertaken in Iraq and Afghanistan. We will also strengthen coordination in multilateral mechanisms aimed at global economic recovery such as the G20.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work to achieve our common Alliance goals through strategic cooperation at every level. Proven bilateral mechanisms such as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and the Strategic Consultations for Allied

Partnership will remain central to realizing this shared vision for the Alliance.

Washington, D.C.

June 16, 2009

I

평화체제 관련 정상간 합의

II

비핵화 관련 주요 합의

III

1. 전임 대통령 연설

2. 문재인 대통령 연설

Sourc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Archives)

(3)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2015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 [2015.10.16.]

국문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 다음에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확고한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특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거듭된 제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On October 16th 2015, President Park Geun-hy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Barack Obam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mmitted to the following.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alliance remains committed to countering the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s well as other provocations. We will maintain our robust deterrence posture and continue to modernize our alliance and enhance our close collaboration to better respond to all form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deep concern about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North Korea’s UN-proscribed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commit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ith 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our common goal, sha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a peaceful manner. North Korea’s continuing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an ongoing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s contrary to North Korea’s commitments under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We strongly urge North Korea to immediately and fully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e oppose any actions by North Korea that raise tensions or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particular, if North Korea carries out a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or a nuclear test, it will face consequences, including seeking further significant measures by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is regard, we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e effective and transparent implementation of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sanctions measures, concerning North Korea, and we encourage all states to exercise strict vigilance against North Korea's prohibited activit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aintain no hosti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to achieve our shared goal of denuclearization. Recognizing the common interests of our Six-Party Talks partners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our coordination with China and the other parties in order to bring North Korea, which has refused all offers of denuclearization dialogue, back to credible and meaningful talks as soon as possible.

We reaffirm that we will never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weapon state, and that it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is incompatible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goals. Along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stand ready to offer a brighter future to North Korea, if North Korea demonstrates a genuine willingness to completely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agrees to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The United States appreciates President Park's tireless effor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including through repeated overtures to North Korea, and welcomes President Park's principled approach that resulted in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August tension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rongly support her vision of a peacefully unified Korean Peninsula, as envisaged in her Dresden address. We will intensify high-level strategic consultations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demning the deplorabl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s documented in the 2014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We look forward to supporting the work of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Seoul). We remain dedicate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to improv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official website)

(4) 한미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2017.06.30.]

국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간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 해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 강화)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 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협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역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압 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

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反ISIS 국제 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 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동맹의 미래)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 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President Donald J. Trump hosted Republic of Korea(ROK) President Moon Jae-in at the White House June 29-30 to advance the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nd deepen the two countries' friendship. Since its founding, the Alliance has served as a linchpin for security,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sia Pacific, and increasingly around the world. As we mark the 67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U.S. commitment to the ROK's defense remains ironclad. President Trump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defend the ROK against any attack and both presidents remain committed to jointly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Built on mutual trust and shared values of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the U.S.-ROK partnership has never been stronger, and the two leaders pledged to build an even greater Alliance.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The two leaders affirmed the Alliance's fundamental mission to defend the ROK through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the enhancement of mutual security based on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President Trump reiterated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drawing on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Regular

dialogue channels such as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and the Military Committee Meeting are instrumental in deepening our Alliance. The two leaders decided to continue the Alliance's work to expeditiously enable the conditions-bas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ROK forces. The ROK will continue to acquire the critical military capabilities necessary to lead the combined defense, and detect, disrupt, destroy,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cluding through interoperable Kill-Chain,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and other Alliance systems.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e U.S.-ROK Alliance commitment to counter the growing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o increase coordination on Alliance issues, the Leaders committed our foreign affairs and defense agencies to regularize a "2+2" Ministerial meeting, as well as a high-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to employ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Maintaining Lock-Step Coordination on our North Korea Polic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pledged to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to achieve our shared goal o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e two leaders called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rhetoric, and to make the strategic choice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The two leaders affirmed that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tests constitute direct violations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UNSCRs) and highlight the accelerating threat its programs pose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y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fully implement existing sanctions and impose new measures designed to apply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to compel Pyongyang to cease its provocative actions and return to sincere and constructive talks. The two leaders also urged all UN member states to swiftly and fully implement UNSCR obligations and took note with appreciation of constructive actions by s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exert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to return to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They noted the important role China could play to this end. In addition, the two sides committed to enhance cooperation to combat North Korea'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malicious cyber activity.

Noting that sanctions are a tool of diplomacy, the two leaders emphasized that the door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remains open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In reaffirming our two sides' shared top priority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the two leaders emphasiz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do not maintain a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ogether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 ready to offer a brighter future for North Korea if it chooses the right path. The two sides decided to closely coordinate on our joint North Korea policy, including how to create conditions necessary for denuclearization talks, through a high-level strategic consultation mechanism.

President Trump supported the ROK's leading role in fostering an environment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leaders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cluding th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the government, and noted their intention to ensure sanctions have minimal impact on North Korea's vulnerable populations. President Trump supported President Moon's aspiration to restart inter-Korean dialogue on issues including humanitarian affairs.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achieve substantial progress in North Korea's deplorable human right situation.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promote regional relations and enhance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The two leaders affirmed that trilateral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 contributes to enhanced deterrence and defense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They decided to further develop this cooperation, using established bilateral and trilateral mechanisms. They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leveraging the U.S.-ROK-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such as cancer research, energy security, women's empowerment, and cybersecurit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decided to discuss further ways to enhance trilateral cooperation together with Prime Minister Abe at the upcoming U.S.-ROK-Japan Trilateral Summit on the margins of the G20 in July.

Advancing Fair Trade to Promote Economic Growth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committed to foster expanded and balanced trade while creating reciprocal benefits and fair trea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at regard, the two sides further committed to foster a truly fair and level playing field, including working together to reduce the global overcapacity of such basic materials as steel, as well as non-tariff barriers to trade.

Both sides pledged to work together, as part of the process of the Commercial Dialogue, to promote investment, support entrepreneurs, and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to boost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in both countries.

Enhancing Bilateral Cooperation on Other Economic Opportunities

Both sides also committed to work together through the Senior Economic Dialogue to promote and expand cooperation on other economic issues and to explore the enhancement of economic opportunities through a joint public-private forum. Given the rol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driving economic growth, we are enhancing our cooperation in cybersecur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ivil space. Highlighting the important economic role women play in our societies, the two sides pledged to launch a bilateral partnership to advance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ctively Collaborating as Global Partner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affirmed that U.S.-ROK cooperation on global issues is an indispensable and expanding aspect of our Alliance. With respect to global health security collaboration, the two leaders affirmed their support in helping partner countries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 threats. The two leaders condemned the grave human suffering and violence in Iraq and Syria caused by ISIS, and reaffirmed the strong U.S.-ROK partnership in the Global Coalition to Counter ISIS. President Trump welcomed the ROK's commitment to increase humanitarian assistance to countries most affected by terrorism and violent extremism, including its pledge to provide 10 million U.S. dollars for Iraq this year. The two side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joint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to rebuild peace and stability in Afghanistan, and pledged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support the Afghan people and government.

Future of the Alliance

The two leaders shared the view that strong and dynamic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are the foundation of the U.S.-ROK Alliance. They decided to advance future-oriented cooperation through high-level consultations in the areas of economy and trade, renewable and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space, environment, health, and defense technolog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support and uphold the rules-based order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two leaders affirmed that the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serves as testament to the power of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and acknowledged that the future of the two countries is linked through people-to-people ties, with more than 1.7 million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visiting and working in the ROK each year, and close ties created through cultural programs and student and professional exchange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heralded the exemplary nature of the U.S.-ROK Alliance, from strengthening our security by deterring and defending against the North Korea threat, to enhancing strong regional relations, to advancing our economic relationship and expanding our global partnership – and stated their expectation that the friendship and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continue to strengthen and grow for many decades to come.

President Moon invited President Trump to visit the ROK in 2017; President Trump gladly accepted the invitation. The two leaders decided to continue to discuss issues of mutual interests on various occasions, including during international multilateral conferences.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ial website)

(5) 한미일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public of Korea, and Japan [2017.06.30.]

국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심각하고 고조되는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7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동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북한의 7월 4일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발사를 규탄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도록 협력키로 약속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3국간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President Donald J. Trump, President Moon Jae-in,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met in Hamburg, Germany, on July 6 to discuss the serious and escalating threat posed by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three leaders condemned the DPRK's unprecedented launch, on July 4, of a ballistic missile with intercontinental range, a major escalation that directly violates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 resolutions and that clearly demonstrates the growing threat the DPRK poses to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as well as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leaders affirmed the importance of working together to counter the DPRK threat and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 shared goal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y also committed to continue to cooperate to apply maximum pressure on the DPRK to change its path, refrain from provocative and threatening actions, and take steps necessary to return to serious denuclearization dialogue. The three leaders emphasized that they, together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 ready to offer a brighter future for the DPRK if it chooses the right path.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will never accept a nuclear armed DPRK.

President Trump, President Moon, and Prime Minister Abe decided to press for the early adoption of a new UNSC resolution with additional sanctions to demonstrate to the DPRK that there are serious consequences for its destabilizing, provocative, and escalatory actions. They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wiftly and fully implement all UNSC resolutions and to take measures to reduce economic relations with the DPRK. The three leaders also called on the nations that border the DPRK to make further efforts to convince the DPRK regime to abandon its current threatening and provocative path and immediately take steps to denuclearize and to halt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The three leaders underscored their commitment to further strengthen their respective alliances and to ensure they continue to increase their capabilities to deter and respond to any attack from the DPRK. They committed to continue advancing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face of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President Trump reaffirmed the ironclad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defend the ROK and Japan using the full range of its conventional and nuclear capabilities.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ial website)

3. 북미합의

(1)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사이의 싱가포르 수뇌회담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2018.06.12.]

조선어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역사적인 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 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 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 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 수뇌회담이 두 나라 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 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 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쉐토회사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and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ial website)

4. 북일합의

(1) 조일 평양선언 [2002.09.17.]

조선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중이찌로 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 중에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 있게 림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력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리차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인식 밑에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리유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 조선인들의 지위 문제와 문화재 문제에 대하여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였다.

4. 쌍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 들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 들사이의 관계가 정상화 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 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2년 9월 17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일본국
총리 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5. 북중합의

(1)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07.11.]

조선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또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 호상 원조 및 지지의 기초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제적 우호협조 및 호상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량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유지 공고화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량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협조 관계의 강화발전은 량국 인민의 근본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각국 인민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확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를 각각 자기의 전권 대표로 임명하였다.

쌍방 전권대표는 전권 위임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호상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체약 쌍방은 량국의 공동 리익과 관련되는 일절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제5조)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협 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량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여 량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 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조인되었으며 조선문과 중국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대표
김일성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주은래

6. 북러합의

(1)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07.06.]

조선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쏘베트 상임 위원회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연맹 간의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킬 것을 지향하면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하여 극동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체약 일방에 대한 무력 침공이 감행되는 경우에 원조와 지지를 제공할 결의에 충만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방 간의 친선, 선린, 협조의 강화가 량국 인민들의 사활적 이익에 부합되며 그들의 경제, 문화의 금후 발전을 가장 훌륭하게 촉진시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목적으로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을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는 소련 내각 수상 니키타 흐루쇼브를 각각 자기의 전권대표로 임명하였다.

량 전권대표는 소정의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자기의 전권 위임장을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극동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한다.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한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2조) 체약 각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3조) 체약 각방은 평화와 전반적 안전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념원하면서 량국의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호상 협의한다.

(제4조) 체약 쌍방은 평등과 국가주권의 호상존중, 령토완정, 호상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에 립각하여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를 강화발전시키며,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원조를 호상 제공하며 필요한 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5조) 체약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조선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6조) 조약은 평양시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을 폐기할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본 조약은 1961年 7月 6日 모스크바에서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내각 수상
엔 에쓰 흐루쇼브

(2)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2000.02.09.]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쌍방’으로 명시함)은 전통적인 친선, 선린, 상호신뢰, 그리고 양국 국민 간 다양한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동등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1조: 쌍방은 주권국가로서의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동등성, 호혜성, 영토성 그리고 다른 국제법들의 원칙 아래 우호관계를 지지, 발전시켜 나아간다.
- 2조: 쌍방은 모든 정치적 침략과 전쟁 행위를 반대하면서 전세계의 군비축소와 견고한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쌍방 중 한 곳에 침략 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
- 3조: 쌍방은 상호 이해가 관계되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쌍방은 쌍방 중 한 곳의 주권과 독립성, 그리고 영토성에 반대되는 협정이나 조약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이 같은 행위나 조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 4조: 쌍방은 지속적인 국제 긴장 요인이 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한반도 국민들의 국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5조: 쌍방은 통상·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해 법, 재정,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이 목적들을 위해 쌍방은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자국 내 입법과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국제법 기준에 근거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조약들을 체결해 나간다.

6조: 쌍방은 양국 의회와 다른 정부 기관, 그리고 사회단체간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국방, 안보,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복지, 권리(인권), 환경보호, 관광, 체육 및 다른 분야들에서 상호 이해 관계에 부합하는 협력관계를 실현해 나간다.

7조: 쌍방은 양국 도시간 형제관계 구축, 기업 및 단체간 직접 접촉, 양측 인사간 접촉을 포함, 다양한 수준에서 다방면의 접촉을 활성화한다.

8조: 쌍방은 양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대국 국민들이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9조: 쌍방은 조직범죄, 민항기와 선박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행위를 포함한 테러, 마약, 무기, 문화 및 역사적 유물의 불법 유통에 대한 전쟁에 협력한다.

10조: 이번 조약은 상대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른 (상대국의) 책임과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떠한 제3자의 이해 관계에도 반하지 않는다.

11조: 이번 조약은 비준 절차를 거친 뒤 비준서를 교환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조: 이번 조약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만일 쌍방 중 한 곳이 12개월 내에 조약 연장 불가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완성된 두 개의 조약 전문은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연방 외부장관, **백남승** 북한 외상 서명



II

비핵화 관련 주요 합의

1. 남북합의

(1)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992.02.19.]

국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The South and the North,

Desiring to eliminate the danger of nuclear war through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create an environment and conditions favorable for peace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country and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the world.

Declare as follows:

1.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not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2.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use nuclear energy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3.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not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4.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verif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all conduct inspection of the objects selected by the other side and agreed upon between the two sides,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and methods to be determined by the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5.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implement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within one (1) month of the

effectuation of this joint declaration.

6.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y the two sides exchange appropriate instrument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procedures for bringing it into effect.

Signed on January 20, 1992

Chung Won-shi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Chief
delegate of the South
delegation to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Yon Hyong-muk

Premier of the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ad of
the North delegation to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ial website)

2. 북미합의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미합중국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93.06.11.]

국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정부급 회담이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뉴욕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로버트 엘 갈루치 국무성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핵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북남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 전면적인 담보 적용의 공정성 보장을 포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 쌍방 정부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1993년 6월 11일

뉴욕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ld governmental-level talks in New York from the 2nd through the 11th of June, 1993.

Present at the talks were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aded by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Kang Sok Ju and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ed b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Robert L. Gallucci, both representing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At the talks, both sides discussed policy matters with a view to a fundamental 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expressed support for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interes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goal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o principles of:

- Assurances against the threat and use of force, including nuclear weapons;
- Peace and security i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ncluding impartial application of fullscope safeguards,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and

- Support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In this context, the two Governments have agreed to continue dialogue on an equal and unprejudiced basis. In this respect,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unilaterally to suspend as long as it considers necessary the effectuation of its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ial website)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기본합의문**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4.10.21.]

조선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 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 핵문제의 전면적 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12일부 조미 합의성명에 명기된 목표들을 달성하며 1993년 6월 11일부 조미 공동성명의 원칙들을 견지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 감속로와 련관 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 1)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 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 키로와트 발전 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 미합중국은 자기의 주도 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연합체를

조직한다. 이 국제연합체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은 경수로제공 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 상대자로 된다.

- 미합중국은 연합체를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 제공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시작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에너지의 평화적 리용 분야에서의 쌍무적 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2)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 서한에 따라 연합체를 대표하여 1호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 감속로와 련관 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너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 대용 에너지는 열 및 전기 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
- 중유 납입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작하며 납입량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매해 50만 톤 수준에 이르게 된다.

3) 경수로 제공과 대용 에너지 보장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들을 받는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 감속로와 련관 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 감속로와 련관 시설들에 대한 동결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완전히 실시된다. 이 1개월 간과 그 이후의 동결 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 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충분히 제공한다.

- 경수로 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 감속로와 련관 시설들은 완전히 해체된다.
- 경수로 대상 건설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5메가와트 시험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 방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폐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두 갈래의 전문가 협상을 진행한다.

- 한 전문가 협상에서는 대용 에네르기와 관련한 련관 문제들과 그리고 흑연 감속로 계획을 경수로 대상으로 교체하는 데서 제기되는 련관 문제들을 토의한다.
- 다른 전문가 협상에서는 폐연료의 보관 및 최종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한다.

2. 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로 나아간다.

- 1) 쌍방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3개월 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 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완화한다.
- 2) 쌍방은 전문가 협상에서 련사 및 기타 실무적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련락 사무소들을 개설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 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킨다.
3.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1) 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 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 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4.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한다.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리행을 허용할 것이다.
 - 2) 경수로제공 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재개된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 3) 경수로 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 핵관련 부분품들이 납입되기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 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 초기 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 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보협정(회람통보/403)을 완전히 리행한다.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 교 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 합 중 국 대표단 단장
미 합 중 국 순회대사
로버트 엘 갈루치

I

평화체제 관련 정상간 합의

II

비핵화 관련 주요 합의

III

1. 전임 대통령 연설

2. 문재인 대통령 연설

Delegations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talks in Geneva from September 23 to October 21, 1994, to negotiate an overal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attaining the objectives contained in the August 12, 1994 Agreed Statemen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and upholding the principles of the June 11, 1993 Joint Statement of the U.S. and the DPRK to achieve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DPRK decid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for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1. Both sides will cooperate to replace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th light-water reactor(LWR) power plants.
 - 1) In accordance with the October 20, 1994 letter of assurance from the U.S. President, the U.S. will undertake to make arrangements for the provision to the DPRK of a light-water reactor project with a total generating capacity of approximately 2,000 MW(e) by a target date of 2003.
 - The U.S. will organize under its leadership an international consortium to finance and supply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to be provided to the DPRK. The U.S., representing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will serve as the principal point of contact with the DPRK for the LWR project.

- The U.S., representing the consortium, will make best efforts to secure the conclusion of a supply contract with the DPRK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for the provision of the LWR project. Contract talks will begin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this document.

- As necessary, the U.S. and the DPRK will conclude a bilateral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2) In accordance with the October 20, 1994 U.S. letter of assurance from the U.S. President, the U.S., representing the consortium, will make arrangements to offset the energy foregone due to the freeze of the DPRK's graphite moderated reactors, pending completion of the first LWR unit.

- Alternative energy will be provided in the form of heavy oil for heating and electricity production.

- Deliveries of heavy oil will begi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and will reach a rate of 500,000 tons annually, in accordance with an agreed schedule of deliveries.

3) Upon receipt of U.S. assurance for the provision of light-water reactor and for arrangements for interim energy alternatives, the DPRK will freeze its graphite 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and will eventually dismantle these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 The freeze on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ll be fully implemented within one month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During this one-month period, and throughout the freeze, the IAEA will be allowed to monitor this freeze, and the DPRK will provide full cooperation to the IAEA for this purpose.
- Dismantlement of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ll be completed when the LWR project is completed.
- The U.S. and DPRK will cooperate in finding a method to store safely the spent fuel from the 5 MW(e) experimental reactor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LWR project, and to dispose of the fuel in a safe manner that does not involve reprocessing in the DPRK.

4)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this document U.S. and DPRK experts will hold two sets of experts talks.

- At one set of talks, experts will discuss issues related to alternative energy and the replacement of the graphite-moderated reactor program with the LWR project.
- At the other set of talks, experts will discuss specific arrangements for spent fuel storage and ultimate disposition.

2. The two sides will move toward full normal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 1)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both sides will reduc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cluding restrictions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financial transactions.
 - 2) Each side will open a liaison office in the other's capital following resolution of consular and other technical issues through expert level discussions.
 - 3) As progress is made on issues of concern to each side, the U.S. and DPRK will upgrade bilateral relations to the Ambassadorial level.
3. Both sides will work together for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 1) The U.S. will provide formal assurances to the DPRK, against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U.S.
 - 2) The DPRK will consistently take steps to implement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3) The DPRK will engage in North-South dialogue, as this agreed framework will help create an atmosphere that promotes such a dialogue.

4. Both sides will work togeth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 proliferation regime.
 - 1) The DPRK will remain a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will allow implementation of its safeguards agreement under the Treaty.
 - 2) Upon conclusion of the supply 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the LWR project, ad hoc and routine inspections will resume under the DPRK'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with respect to the facilities not subject to the freeze. Pending conclusion of the supply contract, inspections required by the IAEA for the continuity of safeguards will continue at the facilities not subject to the freeze.
 - 3) When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LWR project is completed, but before delivery of key nuclear components, the DPRK will come into full compliance with it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INFCIRC/403), including taking all steps that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IAEA,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Agency with regard to verifying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DPRK's initial report on all nuclear material in the DPRK.

Sourc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ventory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rganization and Regimes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communiqué U.S.-D.P.R.K. Joint Communiqué [2000.10.12.]

조선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 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엄 클린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 특사와 일행은 매델레인 알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헨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리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과 미합중국 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 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국민들에게 다같이 이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 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요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 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 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경제무역 전문가들의 호상 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 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 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의하였다는 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최근 년 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분야에서 협조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 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 있는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 시기 실종된 미군 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 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 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력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 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 사이의 북남 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국 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 측은 현행 북남 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 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톤 대통령과 미국인민이 방문 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윌리엄 클린톤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털레인 알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워 싱 톤

As the special envoy of Chairman Kim Jong Il of the D.P.R.K.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 First Vice Chairman, Vice Marshal Jo Myong Rok, visit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October 9-12, 2000.

During his visit, Special Envoy Jo Myong Rok delivered a letter from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irman Kim Jong Il, as well as his views on U.S.-D.P.R.K. relations, directly to U.S. President William Clinton. Special Envoy Jo Myong Rok and his party also met with senior officials of the U.S. Administration, including his host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and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Cohen, for an extensive exchange of views on issues of common concern. They reviewed in depth the new opportunities that have opened up for improving the full range of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meetings proceeded in a serious, constructive, and businesslike atmosphere, allowing each side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other's concerns.

Recognizing the changed circumstances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ed by the historic inter-Korean summit,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decided to take steps to fundamentally improve their bilateral relations in the interests of enhanc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is regard, the two sides agreed there are a variety of available means,

including Four Party talks, to reduc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ormally end the Korean War by replac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ith permanent peace arrangements.

Recognizing that improving ties is a natural goal in relations among states and that better relations would benefit both nations in the 21st century while helping ensur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Asia- Pacific region, the U.S. and the D.P.R.K. sides stated that they are prepared to undertake a new direction in their relations. As a crucial first step, the two sides stated that neither government would have hostile intent toward the other and confirmed the commitment of both governments to make every effort in the future to build a new relationship free from past enmity.

Building on the principles laid out in the June 11, 1993 U.S.-D.P.R.K. Joint Statement and reaffirmed in the October 21, 1994 Agreed Framework, the two sides agreed to work to remove mistrust, build mutual confidence, and maintain an atmosphere in which they can deal constructively with issues of central concern. In this regard, the two sides reaffirmed that their relation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spect for each other's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and noted the value of regular diplomatic contacts, bilaterally and in broader fora.

The two sides agreed to work together to develop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for trade and commerce that will benefit the peoples of both countries and contribute to an environment conducive to greater economic

cooperation throughout Northeast Asia, the two sides discussed an exchange of visits by economic and trade experts at an early date.

The two sides agreed that resolution of the missile issue would make an essential contribution to a fundamentally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o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further the efforts to build new relations, the D.P.R.K. informed the U.S. that it will not launch long-range missiles of any kind while talks on the missile issue continue.

Pledging to redouble their commitment and their efforts to fulfill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in their entirety under the Agreed Framework, the US and the D.P.R.K. strongly affirmed its importance to achieving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 weapons fre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the two sides agreed on the desirability of greater transparency in carrying out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under the Agreed Framework. In this regard, they noted the value of the access which removed U.S. concerns about the underground site at Kumchang-ri.

The two sides noted that in recent years they have begun to work cooperatively in areas of common humanitarian concern. The D.P.R.K. side expressed appreciation for significant U.S. contributions to its humanitarian needs in areas of food and medical assistance. The U.S. side expressed appreciation for D.P.R.K. cooperation in recovering the remains of U.S. servicemen still missing from the Korean War, and both sides agreed to work for rapid progress for the fullest possible accounting. The two sides will continue to meet to discuss

these and other humanitarian issues.

As set forth in their Joint Statement of October 6, 2000, the two sides agreed to support and encourage international efforts against terrorism.

Special Envoy Jo Myong Rok explained to the US side developments in the inter-Korean dialogue in recent months,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historic North-South summit. The U.S. side expressed its firm commitment to assist in all appropriate ways the continued progress and success of ongoing North-South dialogue and initiatives for reconciliation and greater cooperation, including increased security dialogue.

Special Envoy Jo Myong Rok expressed his appreciation to President Clinton and the American people for their warm hospitality during the visit.

It was agreed that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will visit the D.P.R.K. in the near future to convey the views of U.S. President William Clinton directly to Chairman Kim Jong Il of the D.P.R.K.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to prepare for a possible visit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ial website)

(4) 2.29 조선외무성 조미회담에 대한 합의사항 언급Statement by Victoria Nuland, Spokesperson U.S.-DPRK
Bilateral Discussions [2012.02.29.]**조선어**

(평양 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3차 고위급회담이 23일과 24일 중국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 대표단과 글린 데이비스 국무성 대조선 정책 특별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2011년 7월과 10월에 진행된 두 차례의 고위급 회담의 연속 과정인 이번 회담에서는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 조치들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보장,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 되었다.

조미쌍방은 9.19공동성명 리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쌍방은 또한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 조성 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조선에 24만 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 실무적 조치들을 즉시 취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대조선 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 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게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 고위급 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 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냉변 우라늄농축 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임시 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A U.S. delegation has just returned from Beijing following a third exploratory round of U.S.-DPRK bilateral talks. To improve the atmosphere for dialogue and demonstrate it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the DPRK has agreed to implement a moratorium on long-range missile launches, nuclear tests and nuclear activities at Yongbyon, including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The DPRK has also agreed to the return of IAEA inspectors to verify and monitor the moratorium on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at Yongbyon and confirm the disablement of the 5-MW reactor and associated facilities.

The United States still has profound concerns regarding North Korean behavior across a wide range of areas, but today's announcement reflects important, if limited, progress in addressing some of these. We have agreed to meet with the DPRK to finalize administrative details necessary to move forward with our proposed package of 240,000 metric tons of nutritional assistance along with the intensive monitoring required for the delivery of such assistance.

The following points flow from the February 23-24 discussions in Beijing:

- The United States reaffirms that it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and is prepared to take steps to improve our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spirit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and equality.

- The United States reaffirms its commitment to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as the cornerston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 U.S. and DPRK nutritional assistance teams will meet in the immediate future to finalize administrative details on a targeted U.S. program consisting of an initial 240,000 metric tons of nutritional assistance with the prospect of additional assistance based on continued need.
-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take steps to increase people-to-people exchanges, including in the areas of culture, education, and sports.
- U.S.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not targeted against the livelihood of the DPRK people.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ial website)

3. 6자회담 합의

(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합의)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2005.09.19.]

국문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China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July 26th to August 7th, and from September 13th to 19th, 2005.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Song Min-soon,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OK; Mr. Alexandr Alekseye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For the caus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the Six Parties held, in the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equality, serious and practical talks concern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previous three rounds of talks, and agreed, in this context, to the following:

1. The Six Parties unanimously reaffirmed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e DPRK committed to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turning,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IAEA safeguards.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it has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no intention to attack or invade the DPRK with nuclear or conventional weapons.

The ROK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receive or deploy nuclear weapons in accordance with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affirming that there exist no nuclear weapons within its territory.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observed and implemented.

The DPRK stated that it has the right to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other parties expressed their respect and agreed to discuss, at an appropriate time,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 water reactor to the DPRK.

2. The Six Parties undertook, in their relations, to abide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bilateral policies.

The DPRK and Japan undertook to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3. The Six Parties undertook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nergy, trade and investment, bilaterally and/or multilaterally.

China, Japan, ROK, Russia and the US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The ROK reaffirmed its proposal of July 12th 2005 concerning the provision of 2 million kilowatts of electric power to the DPRK.

4. The Six Parties committed to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The Six Parties agr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5. The Six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afore- mentioned consensus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6. The Six Parties agreed to hold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in early November 2005 at a date to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ial website)

(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2007.02.13.]**국문**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 I.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 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II.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 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III.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IV.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 중,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V.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VI.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VII.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연방, 대한민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II조 5항 및 IV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루어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The Third Session of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8 to 13 February 2007.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Chun Yung-woo,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ander Losyuk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 I. The Parties held serious and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actions each party will take in the initial phas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reaffirmed their common goal and will to achieve earl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reiterated that they would earnestly fulfill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The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action for action”.

II. The Parties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in parallel in the initial phase:

1. The DPRK will shut down and seal for the purpose of eventual abandonmen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including the reprocessing facility and invite back IAEA personnel to conduct all necessary monitoring and verifications as agreed between IAEA and the DPRK.
2. The DPRK will discuss with other parties a list of all its nuclear programs as described in the Joint Statement, including plutonium extracted from used fuel rods, that would be abandoned pursuant to the Joint Statement.
3. The DPRK and the US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resolving pending bilateral issues and moving toward full diplomatic relations. The US will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4. The DPRK and Japan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taking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5. Recalling Section 1 and 3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agreed to cooperate in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In this regard, the Parties agreed to the provision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the initial phase. The initial shipment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eavy fuel oil (HFO) will commence within next 60 days.

The Parties agreed that the above-mentioned initial actions will be implemented within next 60 days and that they will take coordinated steps toward this goal.

III. The Parties agre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ollowing Working Groups (WG) in order to carry out the initial actions and for the purpose of full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3. Normalization of DPRK-Japan relations
4.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5.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The WGs will discuss and formulate specific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n their respective areas. The WGs shall report to the Six-Party Heads of Delegation Meeting on the progress of their work. In principle, progress in one WG shall not affect progress in other WGs. Plans made by the five WGs will be implemented as a whole in a coordinated manner.

The Parties agreed that all WGs will meet within next 30 days.

IV. During the period of the Initial Actions phase and the next phase which includes provision by the DPRK of a complete declaration of all nuclear programs and disablement of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processing plant,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1 million tons of heavy fuel oil (HFO), including the initial shipment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FO,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The detailed modalities of the said assistance wi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and appropriate assessments in the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Energy Cooperation.

V. Once the initial actions are implemented, the Six Parties will promptly hold a ministerial meeting to confirm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and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VI. The Parties reaffirmed that they will take positive steps to increase mutual trust, and will make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 VII. The Parties agreed to hold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on 19 March 2007 to hear reports of WGs and discuss on actions for the next phase.

Agreed Minute on Burden Sharing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the ROK, subject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governments' decisions, agreed to share the burden of assistance to the DPRK referred to in Paragraph II (5) and IV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equity; look forward to the participation of Japan on the basis of the same principle as its concerns are addressed; and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process.

Signed in February 12, 2007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ial website)

(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2007.10.03.]

국문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 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I. 한반도 비핵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포기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합중국측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 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II.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합중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기전달된 중유 10만톤 포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IV.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The Second Session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27 to 30 September 2007.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Chun Yung-woo,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ander Losyuk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The Parties listened to and endorsed the reports of the five Working Groups, confirme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l actions provided for in the February 13 agreement, agreed to push forward the Six-Party Talks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s and reached agreement on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goal of which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I.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 The DPRK agreed to disable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subject to abandonment under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agreement.

The disablement of the 5 megawatt Experimental Reactor at Yongbyon, the Reprocessing Plant (Radiochemical Laboratory) at Yongbyon and the Nuclear Fuel Rod Fabrication Facility at Yongbyon will be completed by 31 December 2007. Specific measures recommended by the expert group will be adopted by heads of delegation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being acceptable to all Parties, scientific, safe, verifiable,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ies, the United States will lead disablement activities and provide the initial funding for those activities. As a first step, the US side will lead the expert group to the DPRK within the next two weeks to prepare for disablement.

2. The DPRK agreed to provide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of all its nuclear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by 31 December 2007.
3. The DPRK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transfer nuclear materials, technology, or know-how.

II. On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Relevant Countries

1.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remain committed to improving their bilateral relations and moving towards a full diplomatic relationship. The two sides will increase bilateral exchanges and enhance mutual trust. Recalling the commitments to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the United States will fulfill its commitments to the DPRK in parallel with the DPRK's actions based on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 on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2. The DPRK and Japan will make sincere effort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expediti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the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The DPRK and Japan committed themselves to taking specific actions toward this end through intensive consultations between them.

III. On Economic and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accordance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one million tons of HFO (inclusive of the 100,000 tons of HFO already delivered)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Specific modalities will be finalized through discussion by the Working Group on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IV. On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The Parties reiterated that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will be held in Beijing at an appropriate time.

The Parties agreed to hold a heads of delegation meeting prior to the Ministerial Meeting to discuss the agenda for the Meeting.

Sourc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ial website)



III

대통령 주요 연설

1. 전임 대통령 연설

(1) 노태우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 [1988.07.07.]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지 반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슬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겨레는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 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문화와 역사가 다른 민족 사이에도 과감한 개방과 교류의 새 물결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협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온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자립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자존의 길이며 민족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

변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 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 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거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 ③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 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 간의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 노태우 대통령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1988.10.18.]

(전략)

의장,

나는 지난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직접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분단 이래 남북한은 평화와 통일방안에 관하여 상이한 수많은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아무 전제조건 없이 직접 만나서 쌍방의 견해와 입장을 털어놓고 논의함으로써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토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일성 주석이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반응을 보이는데 대하여 주목하면서, 나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평양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여 온 남북한간의 관계를 상호 신뢰와 공존공영의 관계로 대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설정되어야 하며, 또한 이는 남북 최고책임자 간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있기 전이라도 북에 대하여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남북한은 오늘날과 같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 방안, 남북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이 회담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남북한 간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구조로 인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화해가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국들과 더욱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앞으로도 계속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은 과거에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상호관계가 소원하였던 중국, 소련 그리고 동유럽의 여러나라들과도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상호존중과 평등의 원칙 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번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상호 대화와 이해의 통로를 통해 분쟁의 요인을 해결하며 국민간의 우의와 협력을 넓혀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에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오랜 이웃인 중국이 반세기에 걸친 단절의 벽을 넘어 교류와 협력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한소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최근 상호협력관계가 계속 확대·심화 되어온 많은 제3세계의 비동맹국가들과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가와는 우리의 성장,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기꺼이 나눌 것이며 우리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3세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같은 발전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보람일 것입니다.

의장,

이제 태평양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생동력과 발전에의 의지,

국제간의 협력강화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양문화의 요람이며 태평양 지역의 한 중심인 동북아시아는 지난 1세기를 통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부터 태평양 전쟁, 그리고 한국전쟁과 오늘의 긴장에 이르기까지 세계평화의 시금석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없이 세계의 평화가 없으며, 이 지역국가 간의 협력없이 태평양 번영의 시대는 열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북아에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공고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 일본, 그리고 우리 남북한으로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를 열 것을 제의합니다.

(후략)

(3)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제50주년 경축사 [1995.08.15.]

“통일은 진정한 광복의 완성”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북한동포와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뜻 깊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사에 새 지평을 열자는 굳건한 결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귓전에는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기쁨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던 반세기전 그 날의 환호가 생생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온갖 고난을 뚫고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반세기에 대한 깊은 감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우리 민족의 위대한 시대로 만들자는 굳은 다짐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축복과 7천만 겨레의 기대가 이 자리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 경하스러운 날을 맞아, 나는 먼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을 추모하며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해 오신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 겨레에게 지난 50주년은 가혹한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이라는 엄청난 비운을 안은 채 국가 건설의 대정정에 나서야 했습니다. 물려받은 빈곤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생존마저 위협 받아야 했던 「절대빈곤의 시대」를 헤쳐 나와야 했습니다. 극단적인 남북대치와 군사독재 아래

민주주의가 질식하던 「어둠의 시대」를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식민통치의 사슬을 끊던 불같은 투혼과 강철같은 의지로 우리는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불과 한 세대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는 가장 가난한 나라로부터 이제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민주의 씨앗이 싹트기조차 어렵던 그 메마른 땅 위에 문민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웠습니다. 민족의 자존을 크게 드높이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의 당당한 중심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유와 풍요의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던 선열들의 소망이 마침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것입니다.

내외 동포 여러분!

우리의 성취가 이처럼 빛나는 것임에도 우리의 광복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의 민족성원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일 것입니다.

통일의 큰 길을 열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평화없이 통일된 조국은 물론, 민족의 장래 또한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민족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 간에 협의,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책임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첫 걸음은 신뢰구축이며, 신뢰는 서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같은 기본원칙을 밝히면서 남과 북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광복 50주년이 되는 올해야말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북한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고, 남북간에도 신뢰가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의 절실한 염원이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냉엄한 현실의 과제입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환상적인 기대도 성급한 포기도 모두 금물입니다. 꾸준한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후략)

(4)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선언 -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베를린 자유대학) [2000.03.09.]

존경하는 피터 쾨트젠스 총장, 존경하는 교수 및 내외귀빈, 그리고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나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폐허와 분단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의 변영과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독일 국민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간직하면서 오늘 이 유서 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수 및 학생 여러분과 더불어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주제 아래 대화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정 어린 환영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베를린 자유대학과 이 대학 출신들이 지난 48년 개교한 이래
동서독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독일통일을 앞장서 이끌어온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이
대학을 찾았습니다. 분단국인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독일통일への
교훈을 배운다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 양국은 전쟁과 민족분단의 쓰라린 고통과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은 “라인강의
기적”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아시아 지역을 휩쓴 경제적 위기를 국민과 정부의
헌신,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극복
하였습니다. 97년 말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이제 8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98년도 마이너스 5.8%였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는
10.2%로 상승했습니다. 물가, 금리, 외환, 증시 등이 모두 전례없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률도 금년 내에 4%까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독일은 이러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국민은 비록 독일과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유사성 때문에 독일과 독일 국민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세계는 이제 대립과 갈등의 20세기를 뒤로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뉴밀레니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세기말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독일의 통일됨으로써 50여 년 간 지속되어온 냉전구조가 해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을 고수해온 중국, 베트남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한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친구이자 가장 유망한 경제협력의 상대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의 완고한 폐쇄정책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한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를 위해서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성공적으로 이룩한 동서독 관계와 통일의 경험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로부터 얻은 교훈은 첫째, 독일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켜온 서독 국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독의 대결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대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둘째, 서독은 「접촉을 통합 변화」로 요약되는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동서독 간의 상호공존과 긴장완화의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동독 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이데올로기적 반목을 완화시켰습니다.

셋째, 서독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으로 통일 독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켰으며 놀랍게도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넷째, 서독 정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동서독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독의 대동독정책은 우리 한국의 햇볕정책 추진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십년 동안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의 가장 존경하는 친구인 빌리 브란트 전 총리,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 그리고 겐셔 전 외무장관같은 지도자들과도 여러 차례 귀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정책, 통일 이후의 상황 모두가 우리에게서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은 독일 통일 이후에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와, 특히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를 심각하게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을 보고 한없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격도 컸습니다. 그것은 첫째, 엄청난 자금의 소요입니다. 2천억 마르크면 된다면 통일비용이 10배나 들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양독간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숙제라고 합니다. 둘째, 구동서독인 사이의 심리적 갈등이 아직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독은 경제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더 크고 부유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독과 전쟁을 한 일도 없고, 통일 전에 많은 교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북한을 떠 안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극도의 무장대립 속에 있습니다. 동독 국민은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에서 만개했던 민주주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자유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고립으로 북한 밖의 외부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통일을 서두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 보다는 한반도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화해·협력하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1995년에 『한반도 3단계 통일론』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일종의 독립국가연합의 단계이고, 2단계는 연방체제 아래 남북이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요, 3단계는 완전통일의 단계인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통일방식은 앞서 말한 빌리 브란트 전 총리 등 독일의 지도자로부터도 많은 찬성과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유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

나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아직까지도 개방과 변화를 망설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 용납치 않는다. 둘째, 우리도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이 화해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햇볕정책의 핵심이며 냉전종식을 위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안보를 유지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와 화해·협력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햇볕정책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세 가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회복을 돕는다. 셋째, 북한의 국제적 진출에 협력한다. 그 대신 북한도 세 가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남 무력도발을 절대 포기해야 한다. 둘째,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반자고 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접근방안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정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북한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의 참상을 TV화면으로 보면서 눈물을 금치 못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북한이 피폐한 경제를 회복하여 굶주린 북한동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우리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부로 비록 정부간의 대화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대북한 교류나 협력을 환영하며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제·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18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있는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남북간의 교역도 작년에는 사상최고인 3.4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남한의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도 시작되거나 협상 중입니다. 금년에는 서해공단의 건설, 전자제품공장과 자동차 조립공장 등이 남한의 대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화·스포츠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작년에 여러분이 계신 이곳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갖고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머지 않아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북한과의 국교개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자신을 위한 경제개방에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나는 오늘 뜻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한 이 자리를 빌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는 정경 분리원칙에 의한 민간경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철도,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 정부 당국에 의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단순한 식량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료, 농기구 개량, 관개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농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경협방식 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참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화해와 협력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독일을 위시한 국제사회도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한간 회해와 협력이 조속한 시일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

한국에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연민의 정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분단이라는 크나큰 아픔을 같이 경험한 인간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 국민은 이러한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 통일의 위업을 먼저 이룩한 독일 국민에 대하여 깊은 존경심을 표시하며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배우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사독재자의 억압 속에 신음할 때 독일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우리를 성원해 주었습니다. 나는 독재자와 싸우다 다섯 번의 죽음의 고비와, 6년의 감옥살이, 30년의 망명·연금·감시 하의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독일 국민과 독일의 지도자들은 내 일과 같이 나와 한국의 민주인사들을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 깊은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성원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민은 언제까지나 가장 충실하고 우정이 넘친 친구로서 독일 국민과 베를린 자유대학 여러분들과 함께 새천년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김대중 대통령 CNN 회견 기초연설 [1999.05.05.]

“햇볕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기대”

‘제10회 World Report Contributors Conference’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나와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격려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한국은 참으로 힘겨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온국민이 함께 고통을 나누며 강도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제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을 보다 철저히 완수하여 한국 경제를 본격적인 재도약의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북한 포용정책, 즉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으로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으로 상징되는 대북 접촉으로 약 6만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한 해 동안 3,300명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지난 9년 동안의 방북 인원 모두를 합한 2,400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인적교류는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도 매우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여 열리는 4자 회담과 판문점 장성급 회담,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미·북 회담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당국간 회담의 재개를 위한 분위기도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작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이 발생했고, 미사일 발사나 금창리 지하의혹시설 같은 부정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이 선의만을 가지고 대하리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성의를 가지고 대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공정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북 포용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작년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일본의 오부치 총리로부터도 지지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장쩌민 주석도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최선의 대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러시아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달 중 옌칭 대통령을 만나서 이를 재확인할 작정입니다.

세계의 언론인 여러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분단의 원인이 된 냉전적 국제질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로 오래전에 종식되었습니다. 오직 한반도에서만 적대와 반목 속에서 대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전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이룩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제가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남북간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이룩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함을 뜻합니다.

둘째,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꼭 서울을 거쳐 평양에 가야 한다거나, 마일보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전임 정권들과는 그 입장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선 미·북 간의 제네바합의를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고,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마일·중러 등 한반도 냉전과 관련된 국가들은 물론 가능한 많은 세계의 국가들이 북한과 교류하여 북한에 햇볕이 많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통제·제거하고 군비 통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핵심이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다섯째, 현재의 정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이 서로 오가며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사안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근본문제로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안보는 물론 정치·외교·경제·통상 등 관련사안을 포괄적으로 주고받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와 같이 긴급한 당면현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본적인 문제를 병행해서 해결할 때만이 북한은 안심하고 자기 손에 있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언론인 여러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그의 호의를 기대하는 그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게 하고, 북한 스스로 평화공존의 길을 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 접근과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7천만 한민족에게는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민족의 뜻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6) 노무현 대통령 미국 국제문제협의회(WAC) 주최 오찬
연설 [2004.11.12.]

존경하는 제임스 커티스 맥 회장님, 그리고 국제문제협의회 회원과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친숙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미국의 서부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여러분의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고, 오랜만에 참으로 행복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문제와 한·미 동맹일 것입니다.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난 1년 반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핵문제에 대한 내 의견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 또한 몇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내,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몇 가지 의문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과 다른 해석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인가? 과연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의지는 가지고 있는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만약 북한이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나와 우리 정부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 나아가 전 세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한국의 도움 없이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생존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힘들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물론 한국·중국·러시아의 지원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여러 곳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혁과 개방은 내부적으로 불안과 동요를 가져오고,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면 체제가 위협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온 것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기 보다는, 변화를 수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 받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석일 것입니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스스로도 핵무기로는 어떤 공격적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멸의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하려고 한다는 의혹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이나 그 제조기술을 수출한 것도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7년 이후 북한은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 밖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근거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은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 무력공격을 받거나, 외부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서 체제가 위기에 처하고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보장되고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면, 핵무기는 포기할 것입니다.

결국 북핵문제는 북한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지금의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냐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여러 협상의 조건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북한이 개혁·개방할 의사가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인권이 개선되어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길로 나올 수만 있다면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냉전과 대결의 1970년대 초에도 미국은 중국과 적극 대화에 나서서 수교에까지 이른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은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안 하고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불신이 쌓여 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체제유지와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선뜻 북한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대화할 수 없고, 대화하지 않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다른 어떤 수단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자회담의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가 거론된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무력행사를 얘기하면 전쟁을 먼저 머리에 떠올립니다. 한국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미국 국민의 정서와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고통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 국민에게 또다시 전쟁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존중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봉쇄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입니다. 붕괴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한국 국민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체제위협에 직면했을 때 북한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대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도 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북한도 처음에는 6자회담을 반대했지만 그동안 참가해 왔고, 상당히 진전된 제안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6자회담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미국민 여러분이 뜻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국민에게 전하는 강력한 희망입니다. 이는 또한 한·미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문제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노무현 대통령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 [2007.08.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동포와 7백만 해외동포 여러분,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경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선진민주국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하나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보통국가로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세계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냉전체제는 해체되었으나 아직 평화와 공존의 질서가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대결적 분위기가 조성될지 모릅니다.

참여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 역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이 성공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길이라는 인식과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균형적 실용외교’는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전략입니다.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북핵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답게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하고, 국방개혁 2020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상호존중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인내로써 적대적 행위를 절제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신뢰를 쌓아온 결과, 북핵 사태의 와중에도 남북관계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기와 비교해도 남북 교역량은 두 배, 협력사업은 네 배, 인적왕래는 일곱 배가 증가했습니다.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만7천 명의 남북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1단계 입주 완료되면 10만 명의 근로자가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상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도 잘 관리되어 참여정부 내내 단 한차례의 무력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점차 해소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지수가 미국,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도 있습니다.

북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남북대화나 경제협력에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과 관련한 여러 법령과 조직이 정비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재력과 우수한 인력은 다방면의 교류협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진전될수록 북한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우리에게 큰 과제였던 북핵문제도 이제 해결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단지 북핵문제의 해결방안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계획이 올해 2.13 합의로 구체화되었고, 북한 핵시설 폐쇄라는 초기조치가 이행되었습니다.

저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가 추진한 대외정책, 안보정책은 대부분 실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6자회담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서로 선순환의 관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할 것입니다. 6자회담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전 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이 함께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 시대가 열리면 한반도는 명실 공히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동북아시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고, 북한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2주 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진전과 그 이후의 동북아 다자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남북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72년 7.4 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이 그것입니다. 이 4대 합의는 남과 북의 역대 정부가 남북의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남북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선언보다 이미 한 합의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가, 북쪽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회담의 전 과정에서 역사가 저에게 부과한 몫을 잘 판단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과 조화를 이루고 6자 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은 안 된다’, ‘이것만은 꼭 받아내라’는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큰 틀의 미래를 위해 창조적인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62년 전, 우리는 분단을 우리 힘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협력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하기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내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정파적 이해가 다를 일이 없습니다. 어느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매 정부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다음 정부에 물려주고, 다음 정부는 기존 성과의 토대 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진전을 이뤄가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도 역대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여 스스로 한 합의를 뒤집지 않는 대북정책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힘과 대결의 질서에서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가 되는 희망찬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이뤄낸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빛나는 문화를 창조해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 역량과 저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8) 노무현 대통령 2007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2007.10.04.]

여러분, 이렇게 이곳까지 저를 마중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 시간에 도착 못해서 아마 저녁도 못 잡수셨을 것입니다.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처지라서 과연 가야 하는 것인지, 가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얼마만큼 임기 안에 마무리를 하고 또 무엇을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할 것인지 무척 고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음 정부에 넘긴다면 지금의 이 좋은 기회에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시간적으로 너무 뒤로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은 반면 더 많은 분들은 갔다 와야 된다고 하시면서 대신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라고 주문을 내놓으시는데, 정말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 주문을 어떻게 다 소화할까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듬고 간추려서 최대한 다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한 보따리가 돼서 가는 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성사시키고 올 것인가 걱정이 돼서 정말 발걸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오는 보따리가 좀 적더라도 만남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해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한 자락 깔아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 왔던

보따리를, 보자기에 싸 가지고 갔던 일거리를 확 풀어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보자기로 다시 성과를 싸는데, 가져갔던 보자기가 적어서 짐을 다 싸기가 어려울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언도 해 주시고 많은 제안들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논거까지 하나하나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했더라면, 또 몇 사람 참모만 가지고 이 일을 했더라면 결코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언을 해 주신 많은 분들은 물론이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해외에 나갈 때도 조용히 나가고 돌아올 때도 조용히 들어오곤 했습니다. 연설하고 박수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성대한 환영식과 열렬한 박수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양에서 북녘 동포들이 저에게 보여 주신 뜨거운 환영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쪽 긴 거리를 가며,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녘 사람들과 북녘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정말 꼭 우리가 해야겠구나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는데, 첫 회담 마치고 정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 느낌이 ‘아, 양측 간에 사고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고 너무 벽이 두꺼워서 무엇 한 가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지 눈앞이 좀 캄캄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

그래도 은근히 기대를 가져 봤습니다. 같이 갔던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북측과 많은 회담을 했던 분들이 저를 위로하면서 그분들이 항상 본시 군기를 그렇게 잡으니까 처음에 군기 잡은 거지, 말하자면 기세 싸움 한 것이지 꼭 안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내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번 만나 보자, 그때까지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해 보라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만났습니다.

오전에는 좀 힘들었습니다만, 오후 가니까 좀 잘 풀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좀 통합이다.

사실 제가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북핵문제입니다. 남북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서 이 합의가 있고, 북핵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6자회담에서 풀고 있고 지금 잘 풀려 가고 있는데, 저더러 자꾸 ‘북핵문제 해결하고 와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제 해결의 타작마당은 따로 있는데 저더러 따로 어디서 또 타작마당 벌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저로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얘기를 꺼내서 또 확인하자는 것이 회담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기존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6자회담의 장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남북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자, 쉽게 말하면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가 같이 풀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김정일 위원장께서 아무 이의 없이 북핵문제에 대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요한 선언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원칙으로 재확인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고, 이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인 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6자회담에서 북측이 민감한 여러 가지 표현들에 있어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협력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또 북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담 도중에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회담장에 들어오도록 해서 10월 3일 공동성명의 합의 경과를 직접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한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6자 회담의 진행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잘 풀려 갈 것으로, 따라서 핵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북핵문제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체제로 가려면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이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원칙에 있어서 남북이 주도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 간의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를 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당사자 간에 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자고 각국에 이렇게 제안하도록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 과정의 일환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한번 노력을 해 보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로 선언문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당사국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이 문제도 북측으로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 확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협력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 간, 그리고 북·일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합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은 합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중요성을 여러 차례 매우 강조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께서 매우 경청했다, 이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제 우리는 분단 반세기 만에 냉전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 문제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 협력의 관점에서 서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을 설치하고, 해주공단을 개발해서 개성공단·인천항과 연결하고,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묶어서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해 나가는 포괄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참모들과 상의한 다음에 우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상선언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명쾌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 남북 공동선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남과 북은 서해 안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중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협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저는 경제협력에 관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실질 회담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개발 등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 경협은 어느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경제협력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중에서 대북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북 경제협력 하면 얼른 '일방적 지원'을 항상 머리에 떠올리는데, 회담에서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됐을 때에는 북측으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도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점을 매우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지역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남북 경협이 잘되지 않고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런 장애 요인을 해소하면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의 많은 장애 요인들을 건건이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과 절차가 많이 걸리고 해결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개발 방식을 통해서 법과 제도, 인프라 문제 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남북 경협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시장경제 원칙 아래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남북 당국이 합의한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군사적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남북 관계의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 북-미, 북-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서 국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역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남북이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번영의 구상을 미리 준비한 바에 따라서 상세하게 밝히고, 경제

협력을 좀 더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남북 경협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인식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은 평화 정착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남북의 어민과 우리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평화 변영의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해주 지역의 특별 지대 설정은 개성과의 관계, 인천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남북 간에 논의되어 오던 각종 경협사업들이 정상 간 합의로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일일이 합의를 하려고 하면 너무 끝이 없어서, 앞으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 가기 위해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간 부총리급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즉 문제는 제기되지만 해결한다고 하면서 계속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기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제안과 합의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합의가 남북 경협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변영, 그리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변영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단지 평화의 문제, 그저 일반적인 경제 변영의 문제를 넘어 한국경제, 특히 구조조정 문제에서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 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기틀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북방 경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너무 까마득해서 ‘혹시 허황된 주장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좀 속도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 ‘북방 경제’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이름이 별로 좋진 않아서 앞으로 좋은 이름으로 붙여 야겠습니다만, 한국경제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이 평화를 구축하고 또 평화가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남북 경제의 ‘상생의 경제’ 실현과 평화와 변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분야는 양측이 서로 제기할 사항이 많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먼저 화해의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산가족·납북자·국군 포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공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 대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시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자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해결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대화의 기회를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서 역사·언어·교육·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 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서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국가 정상 간에 그런 선례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서 현안 문제들을 협의한다는 정도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자주 좀 만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회담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돼 오던 남북 대화의 총괄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 중에 서울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요청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우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제안하고 본인의 방문은

여건이 좀더 성숙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15 공동선언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들이 진전을 이루고 남북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것이 결국 통일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서, 우리 국민들은 동서독과 같은 급작스러운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상호 공존공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 회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주’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공조,’ ‘민족공조’의 문제가 쟁점이 되지만, 저는 한국 정부가 비자주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점도 설명하고, 또 자주성의 수준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와 협력도 중요하고, 필요할 때 항의도 하고 또 항의를 수용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배제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함께 발전해 나가자면 결국 우리가 고립을 벗고 세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뻗어 나가면서, 자주에는 많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점차 높여 나가는 것으로 문제를 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히 깊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동행한 특별 수행원들이 지금 이 단상에 계십니다만 7개 분야별로

북측과 간담회를 열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소통을 더욱 넓히는 데 아주 유익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남북 경협도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새롭게 발전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남북관계 역사를 볼 때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실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11월 중에 예정된 총리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행 과정은 준비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사항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좋은 것이면 찬성해서 불리해지는 것이 없는 것이고, 합의가 나쁜 것이면 반대해서 불리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합의 자체가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대하는 태도나 후보들의 전략 자체가 유리, 불리를 가르는 것입니다. 이 합의가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맞추어서 어느 정부든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 이상 더 나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합의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공동선언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더욱 잘 풀어 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시다만, 어쩐지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알맹이는 선언문에 있는데, 선언문 내용 중 한두가지 외에는 오늘 저의 설명에 들어 있지 않고 배경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 보고가 어떻게 보면 조금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허전하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목직한 보따리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선공업지대를 만들기로 한 것은 우리 남측 경제에 있어서, 또 북측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아주 유익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좋은 계기일 뿐만 아니라 조선공업이 가지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생각하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구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북측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특구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공세적으로 자꾸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총리회담이나 부총리급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좀더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두산 얘기도 있는데, 선언문을 다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이 이미 선언문을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배경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격려해주신 여러분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 이명박 대통령 CFR·KS·AS 공동주최 오찬 연설

[2009.09.21.]

고맙습니다. 우리 루빈 전 장관께서 좋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3개 단체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리처드 하스 회장님, 토머스 허버드 이사장님, 에번스 리비어 회장님, 비샤카 드사이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기관의 회원 여러분이 공동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까지의 한·미 양국 관계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두 나라가 한·미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략)

신사 숙녀 여러분!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 지역입니다. 이러한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뿌리내리는 것은 우리 한·미 동맹에 남겨진 중대한 과제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먼저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나타내는 징후는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북핵 문제는 대화와 긴장 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그리고 지연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야 합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쳐

돈 채 핵 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틀 안에서 5자 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자 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진(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포기의 결심을 내린다면 북한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평화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북한 스스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나오겠다는 북한을 적대시할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합니다.

그동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온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러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을 하게 되더라도 북핵 문제의 해결이 주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

확고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한·미공조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이행도 철저히 해 나가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북한에게는 지금이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아마도 북한은 마지막일지 모를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의 한·미동맹은 전쟁과 냉전을 겪어 보지 않은 새로운 세대의 손에 맡겨질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각국들도 전후세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55년 만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정치 개혁을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주의 제17기 당대회를 통하여 제4세대 주도의 통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협력이 모색되어야 하고 그러기에 더더욱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시아는 더 이상 이념과 체제를 잣대로 나뉘어 대립하는 적대 진영 외교의 무대가 아닙니다. 세계와 지역이 마주한 공통 위협을 직시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번영을 추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지니는 미국의 전략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보며, 한·미동맹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도 한층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이 이제 또 다른 미래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온 동맹의 성과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한·미동맹이 범세계적 평화에 기여하고 다자안보협력과도 공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64차 UN 총회에서의 기후변화회의가 성과를 거두어 올해

말 코펜하겐에서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도록 미국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0) 이명박 대통령 제64차 UN총회 기조연설 -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코리아와 녹색성장
[2009.09.23.]

(전략)

국제평화와 안보는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오늘날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은 국제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려면 핵비확산조약(NPT)등 국제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강력한 의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작년 10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핵군축 5개항 제안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하였습니다.

인류의 염원과 희망을 담고 있는 이러한 구상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구상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가 진정한 화해와 통일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도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임할 것이며, 북한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합니다.

1992년 남북한이 약속한 비핵화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Grand Bargain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그리고 북한 스스로를 위해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후략)

(11) 이명박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2011.10.13.]

존경하는 베이너 하원의장, 바이든 부통령, 상하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이 곳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기에 앞서 어제 밤 코러스(KORUS) FTA를 상하원 의회 지도부의 각별한 노력과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켜 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 길을 날아와 여러분 앞에 선 지금, 나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오랜 우정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이자 또 친구이며, 동맹이자 동반자입니다.

지난 60여 년의 한·미 동반자 관계를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바로 “같이 갑시다.” 이것이 영어로 하면, “We go together.”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6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미 양국 모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중략)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국력은 단지 경제 수치만으로 측정될 수는 없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 주며,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써 맺어진 동맹’입니다.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53년 10월, 이 곳 워싱턴에서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해 서로를 방어한다는 공동 결의를 서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들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이 홀로 있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유를 수호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나 위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준 데 대해,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28,500명의 주한 미군의 헌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신의를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는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존 코니어스(John Conyers) 의원,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의원, 샘 존슨(Sam Johnson) 의원, 하워드 코블(Howard Coble) 의원께 각별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들에게는 6.25전쟁이나 남북분단이 결코 추상적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누나와 동생은 전쟁 통에 어린 나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 눈 앞에서 쓰러진 그들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도움은 커녕, 약조차 구할 수 없었던 우리 어머니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반도의

분단을 결코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한은 언어와 역사, 관습이 같은 한 민족입니다. 남쪽과 북쪽에는 부모, 형제가 헤어진 채로 반세기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한반도 7천만 전체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반도에 평화의 기반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한국은 그 어느 국가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 이웃 국가들의 번영을 촉진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향후 대응에 있어 매우 분명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진전을 이루는데 있어 유용한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북한과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식의 기초 하에, 원칙에 입각한 대북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길만이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발전은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유지하고 도발하지 않겠다는 북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후략)

(12)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2013.05.08.]

존경하는 베이너 하원의장님, 바이든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한국과 미국의 우정과
미래에 대해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제 저는 워싱턴에 도착해서 포토맥 강변에 조성된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이 비문은 매번 방문할 때마다 깊은 감명을
줍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친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참전용사 네 분, 존 코니어스 의원님, 찰스
랑겔 의원님, 샘 존슨 의원님, 하워드 코블 의원님께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존경하는 상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저는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 나아갈 우리의 미래(Our Future Together)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60년간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 나아가 지구촌의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3가지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지속적인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외 기업들도 투자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탈과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도발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영유아 등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련 없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 감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속담에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신뢰구축은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기간 제재를 하다가 적당히 타협해서 보상을 해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핵보유와 경제발전의 동시 달성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실현할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국민 삶의 증진과 국민의 행복인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는 하나의 목소리로,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관계도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 전,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비무장지대(DMZ)”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비무장지대 사이에서 둔 대치는 이제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남북한 만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풀어야 하고, 이제 DMZ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 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사분계선으로 갈라져있는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 날을 위해 미국과 세계가 우리와 함께 나서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하원 의원 여러분,

한미 동맹이 나아갈 두 번째 여정은 동북아 지역에 평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길입니다. 오늘까지도 동북아 지역은 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내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의존은 하루가 다르게 증대하고 있으나, 과거사로부터 비롯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는 역내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은 뒤쳐져 있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노력해 나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갈등들도 호혜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협력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한미 양국이 함께 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한미 동맹이 나아갈 세 번째 여정은 지구촌의 이웃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한국 국민, 한반도,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실현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새겨진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미동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정신 아래 평화와 자유 수호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러 대응, 핵 비확산,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양국의 공조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자유, 인권, 법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빈곤 퇴치, 기후변화,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상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 이후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면서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자유와 평화수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 한국을 향한 여정을 함께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도 이제는 한 단계 더 높고, 미래지향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제시한 Startup America Initiative,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국정전략은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밝은 미래를 개척해 갈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한미 양국은 K-POP 가수의 월드투어에서,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동의 재건현장에서 함께 뛰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미래는 삶을 더 풍요롭게, 지구를 더 안전하게,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미 양국과 지구촌의 자유와 평화, 미래와 희망을 향한 우정의 합창은 지난 60년간 쉽 없이 울려 퍼졌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3)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2014.03.28.]

존경하는 한스 뮐러 슈타인하겐 총장님과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
그리고 드레스덴 공대의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독일의 명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 드레스덴은 구 동독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지역으로 분단극복과
통합의 상징입니다.

독일 민족은 이곳 드레스덴을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하고, 풍요로움이
넘쳐 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현실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드레스덴은 용기와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드레스덴에서 하나 된 독일의 오늘과 분단 70년을 앞둔
한반도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를 둘러보며, 이곳이 바로 국가의 장래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이 다리를 잇고, 교육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는 드레스덴
공대의 교육이념이 드레스덴 공대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

구현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대학시절 전자공학을 공부한 공학도로서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 후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 만들고,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창의성과 혁신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과 결합하여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것이 창조경제입니다.

또한 드레스덴市와 같이 학교, 산업,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가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드레스덴市와 대학의 발전은 창조경제를 향한 우리의 노력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독일은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87불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독일에 건너와 광부와 간호사로 조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하려고 해도 동북아의 작은 나라, 더욱이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 어느 나라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암울한 시기에 독일은 한국에게 차관 1억 5천만 마르크를 제공하였고, 선진기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도움은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을 방문하셨던 한국의 대통령은 2차 대전의 폐허를 극복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기적을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 하셨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고, 독일의 철강산업을 보면서 우리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도로를 놓고, 철강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가서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만들려고 하자, “다닐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고속도로 건설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반대에 부딪쳤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제철소냐” 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고속도로는 이후 한국 경제성장에 탄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해 물류와 유통의 숨통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지금 세계 5, 6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50년 전 차관조차 받기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독일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독일의 신뢰와 믿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의 청년 여러분!

독일인과 한국인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은 모두 2차 세계대전 후 나라가 둘로 나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들은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기 보다는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두 나라의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국가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한국은 뉘이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아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 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독일인들의 담대한 용기를 기억합니다.

그토록 높아 보였던 베를린 장벽도 동서독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미래마저 바꾸었습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 동독지역들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들 역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 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남북한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이 있습니다.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불신의 장벽’도 쌓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 ‘사회 문화적 장벽’도 높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단순히 하나의 영토, 하나의 체제를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통일 이전 동서독 주민 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기에 통일 직후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고 현재와 같이 통합된 독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이벤트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 간의 만남조차 외면하면서 민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이면 헤어진 지 70년입니다.

평생 아들 딸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가족들의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리다가 작년에만 한국에서 3천 8백여 명의 이산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측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 동서독은 이산가족 등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방문을 허용했고, 꾸준한 교류를 시행했습니다.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풀고 동시에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발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독일 및 유럽의 NGO 등의 동참, 그리고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 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분단된 한반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남북한을 가로 지르는 휴전선과 그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DMZ)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남북한과 UN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DMZ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내고 생명과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같이 번영하는 길이며,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주변국과 조화롭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저는 곧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통일과정과 통합과정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드레스덴 시민과 학생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왔습니다.

독일이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 위대한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듯이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진전이 동쪽 끝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었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존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의 교정에서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된 독일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남북한 청년들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함께 공부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날엔 독일과 한반도의 젊은이들,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라시아 열차로 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보다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여정에 독일인 친구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진정한 친구 독일과 드레스덴 대학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70주년 경축사 [2015.08.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70년 전 오늘의 벽찬 감동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은 광복과 함께 남북 분단 7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미국-쿠바 수교와 이란 핵협상 타결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는 변화와 협력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속칭을 강행하고 있고, 북한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간 통합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핵개발을 지속하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DMZ 지뢰 도발로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도발과 위협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향상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72년 남북한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남북간 대립과 갈등의 골은 지금보다 훨씬 깊었고, 한반도의 긴장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남북한은 용기를 내어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분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도발과 핵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DMZ 도발을 겪으면서, DMZ에 새로운 평화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DMZ에, 하루속히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저는 취임 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 생명과 평화의 공원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하고, 그 구상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이제 남북이 함께 첫 삽을 뜨는 일만 남았습니다.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남북간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면, 한반도 백두대간은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유라시아 차원의 협력을 실현하는 새로운 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내려놓고, 생명과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0년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드리는 일에도 북한은 성의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부모없는 자식이 없듯이 북한의 지도자들도 이산의 한은 풀어주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 주길 바랍니다.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이념이 대립한다고 해도, 인도적 견지에서 남북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입니다.

북한도 이에 동참하여 남북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남북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여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한반도의 자연재해와 안전문제도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홍수나 가뭄, 전염병 등의 반복되는 문제에 일회적 상황관리로 대응하기 보다는, 남북간 보건 의료와 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보다 나은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 번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과정에서 남북한은 개성공단의 검역 관리에 협력한 바 있고, 현재 금강산 산림재해 대응을 위해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위생·수자원·산림관리를 비롯한 남북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70년 분단으로 훼손된 민족의 동질성도 회복해야 합니다.

민간차원의 문화와 체육교류를 통해 남과 북이 만나고 마음을 열어간다면, 민족 동질성도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남북간 장벽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역사유적 발굴조사와 겨례말 큰 사전 편찬 사업과 같은 학술 문화 교류, 축구와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교류는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 해외의 8천만 동포 여러분,

비록 북한의 거둬들인 도발로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광복 70주년을 맞는 역사의 길에서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면, 희망과 기적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이룬 새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8천만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진하며,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구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장점을 결합하고, 한반도 교통망을 대륙으로 연결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경제권을 연계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꿈이 이루어진 광복 100주년을 내다보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이루어 나갑시다.

(후략)

2. 문재인 대통령 연설

(1) 미국전략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연설 [2017.06.30.]

존경하는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은 취임 후 나의 첫 해외 방문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먼저 대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의 주제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서문에도 위대한 동맹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중략)

지금 우리 앞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입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입니다.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나는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동맹은 평화를 이끌어내는 동맹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한반도 평화 구상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정상선언, 이들 합의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평화를 역설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절차까지 합의하고도 실행에 실패한 지난 10년의 세월이 보여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지금이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 사실이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철저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여정은 위대한 한미동맹의 여정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출발해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로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방향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 폐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입니다. 당사국으로서, 또한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한국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어제 이러한 비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앞에는 북핵 문제를 넘어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테러리즘, 환경 문제, 난민, 기아, 전염병과 같은 초국경적 현안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민주,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건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임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 등에서의 평화 정착과 재건 노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안주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새로운 구상을 담대하게 실천해 가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된다는 나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평화의 번영, 가치의 재건에 기여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웹비어 씨의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또 열매입니다. 나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정상으로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사가 웹비어 씨의 가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던진 충격과 비통함에 공감합니다. 웹비어 씨와의 이별이 그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의 가치와 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국민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키퍼버 재단 초청연설 [2017.07.06.]

존경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하울젠 하울젠(Thomas Paulsen) 키퍼버재단(Korber-Stiftung) 이사님과
 모드로프(Hans Modrow) 전 동독 총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냉전과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 그 힘으로 유럽통합과
 국제평화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과 독일 국민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독일 정부와 키퍼버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별세하신 고(故) 헬무트 콜(Helmut
 Josef Michael Kohl) 총리의 가족과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냉전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을 주도한 헬무트 콜
 총리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베를린(Berlin)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화해·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입니다.
 여기 알테스 슈타트하우스(Altes Stadhaus)는 독일 통일조약 협상이
 이뤄졌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나는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독일 통일의 경험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평화와 협력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통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독의 시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했고 양측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비정치적인 민간교류가 정치 이념의 빗장을 풀었고 양측 국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나갔습니다.

동방정책이 20여 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유럽에 평화질서가 조성될 때, 그 틀 안에서 독일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때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튼튼한 안보를 확보하고, 양독관계에 대한 지지를 보장받았습니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첫 걸음을 뗀 독일의 통일과정은 다른 정당의 헬무트 콜 총리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베를린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함께 기억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분단과 전쟁 이후 60여 년간 대립하고 갈등해 온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대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 원칙과 방향을 담은 9.19 성명과 2.13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북미 관계, 북일 관계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대화의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합니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회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한, 당면한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나의 구상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같은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건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절실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세계의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합니다. 남북한 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의 핵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관리체제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북한이 핵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 대화와 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53년 이래 한반도는

60년 넘게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도 안 됩니다. 평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나는 ‘한반도 신경 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입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남북한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헤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60년 넘게 치유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남과 북 정부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가족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가운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입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입니다.

분단으로 남북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하천이 범람하면 남한의 주민들이 수해를 입게 됩니다. 감염병이나 산림 병충해, 산불은 남북한의 경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북이 공동대응하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공헌해 왔습니다. 민간교류의 확대는 꼭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갈 소중한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합니다.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첫째,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0.4 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남과 북은 10.4 선언에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 날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한 걸음 더 나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 합니다. 분단독일의 이산가족들은 서신왕래와 전화는 물론 상호방문과 이주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이산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합니다.

둘째,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 100km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2년 후 2020년엔 하계올림픽이 동경에서, 2022년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에서 이어지는 이 소중한 축제들을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스포츠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둥켜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정상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IOC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셋째,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 군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에서 생활하는 양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당국자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땔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독일은 한국보다 먼저 냉전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했지만 지금은 지역주의와 테러, 난민 문제 등 평화에 대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는 독일이 베를린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정신으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고 독일 사회와 유럽의 통합을 완성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냉전의 해체를 서울과 평양에서 완성하고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동북아와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은 평화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은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인류의 더 나은 삶, 세계의 더 좋은 미래를 향해 굳세게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3) 남북정상 공동선언 발표문 [2018.04.27.]

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평화를 바라는 8,000만 겨레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 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내고 통 큰 합의에 동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0·4 남북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방식도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앞에 서서 공동 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 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4) 판문점 정상회담 만찬 환영사 [2018.04.27.]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안고 만났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우리에게 모였습니다. 역사적 사명감으로 우리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매우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북측 속담에 “한가마밥 먹은 사람이 한울음을 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찾아온 손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야 마음이 놓이는 민족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과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나누고 풍성한 합의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평양냉면이 오늘 저녁의 의미를 더 크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앉기까지 우리 겨레 모두 잘 견뎠습니다. 서로 주먹을 들이대던 때도 있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서러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회담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남북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의 봄을 기다려 오신 남과 북 팔천 만 겨레 모두 너무나 고맙습니다.

귀빈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오다 보면 남과 북을 가로막는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희미해져서 끝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 우리는 너무나 한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장벽은 더욱 높아져 첩벽처럼 보였습니다. 10년 세월을 가르고 단숨에 장벽을 다시 연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분단의 상징 판문점은 세계평화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진심을 다해 대화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함께 받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갈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귀빈 여러분,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남과 북은 오늘 대담한 상상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에서 화해의 악수를 건넨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평화를 염원하며 뜨겁게 환영해 주신 남측 국민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통전부장은 특사로 방문해 대화의 물꼬를 터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오늘처럼 남북이 마주앉아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로 대화하고 의논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북측의 계관시인 오영재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제 만났으니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다시는
이 수난의 역사, 고통의 역사, 피눈물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또다시 되풀이된다면
혈육들의 가슴이 터져 죽습니다
민족이 죽습니다
반세기 맺었던 마음의 응어리도
한순간의 만남으로 다 풀리는
그것이 혈육입니다
그것이 민족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만남으로 민족 모두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가마 밥을 먹으며 함께 번영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귀빈 여러분,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는 북측 속담이 참 정겹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올해 신년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어제를 옛날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달려가면 평화의 길도, 번영의 길도, 통일의 길도 성큼성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 강토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영변의 진달래는 해마다 봄이면 만발할 것이고 남쪽 바다의 동백꽃도 걱정 없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건배사를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오래 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 장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측에서는 건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저는 “위하여”를 함께 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5)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2018.05.2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의 정상에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8.08.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중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 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북은 군사당국 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 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견힐 때 서로 간의 협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 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인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 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경기도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 나라가 ‘유럽석탄철강 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값 11,500원



ISBN 978-89-8479-921-9
ISBN 978-89-8479-920-2 (전4권)